

#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12일 공식 발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발족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시도민 의견수렴,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광주에서는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 전남에서는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위원은 양 시도 의회, 시군구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광주·전남에서 각각 8명씩 선정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발족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난 9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와대 오찬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시·도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방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행정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에 이어, 이날 '추진협의체'를 발족함으로써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실질적 추진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통합

민관합동 실무기구...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 첫 회의 개최... 특별법·시도민 의견수렴·공론화 방안 논의



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안을 제안하며 시·도민 참여 공론화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행정통합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회적 논의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별·계층별 목소리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광주·전남 대통합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지

난 8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구성, 27개 시·군·구를 순회하는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와 함께 추진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 시장을 선출해 7월 1일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 행정통합의 새 역사를 열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 씨앗을 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추진협의체는 시도민의 이야기를 듣고, 입법 지원을 하고, 무한대의 상상력으로 광주·전남 통합의 미래를 그려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 동구, '2025 광주시 인권 우수실천단지' 최우수상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공동주택 내 인권 존중 등 확산 인정

광주 동구는 용산지구에 위치한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아파트(820세대)가 '2025년 광주광역시 인권 우수 실천단지' 최우수 단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공동주택 내에서 인권 존중과 상생 문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온 노력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인권 우수실천단지' 선정은 공동주택 내 인권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하는 상생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모에 참여한 단지들을 대상으로 시·구 담당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 주민위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단지를 선정했다.

평가 기간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간의 추진 실적을 대상으로 했으며, ▲입주민·근로자의 인권 보호 ▲근로환경 개선 ▲인권 인식 제고 활동 등 실질적인 인권 증진 성과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세부 항목으로는 ▲인권 관련 협약 체결 ▲입주민 대상 인권 교육 및 캠페인 ▲근로자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근로자 처우를 반영한 관리규약 정비 등이 포함됐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계룡리슈빌

더포레스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공용한, 관리사무소장 안동완)는 관리 종사자의 노동 인권 보호와 상생 문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도입해 왔다. 해당 단지는 2019년 5월 입주(820세대, 10개 동)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잡수입 내역, 관리비 내역, 관리비 차감 적립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 각종 계약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받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고, 광주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와 상생 협약, 화순군과의 자매결연, 용산지구 한마당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에도 힘써왔다.

동구 관계자는 "계룡리슈빌더포레스트 아파트는 공동주택이 주민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경비원·미화원 등 모든 근로자가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호동·백진동 일원 서창천 산책로 입구 9곳에 스마트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 서구, 서창천 산책로에 스마트 자동차단장치 설치

기상이변 대응 위해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인명피해 사전 예방 기대

추진된다.

스마트 자동차단장치는 차단기, CCTV, 원격제어기로 구성돼 있으며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하천 수위 상승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으

로 자동 차단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하천관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수동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해 시간 지연과 인력 부담이 컸으나 이번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는 이번 사업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입해 올해 초 공사에 착수하고 4월까지 시설을 준공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12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을 치하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한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사업 실적을 평가했다.

## 광주 남구,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정신상담 서비스(바우처) 신청률을 비롯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건수, 예산 집행률,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실시율 등을 평가 지표로 반영했다.

우수기관에 선정된 배경은 적극적인 서비스 홍보를 바탕으로 바우처 제공 신청률을 크게 높이고, 탄탄한 상담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먼저 남구는 지난해 정신상담 서비스 신청률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2025년 한해 주민들에게 정신상담 바우처 285건을 제공하면서, 전년도인 2024년 한해 171건보다 무려 66%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24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관내 서비스 기관은 5곳에 불과했는데, 2025년에는 해당 기관이 10곳으로 2배 증가했다.

관내 주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신규 모집 공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관내 상담센터에 연락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밖에 예산 집행률 분야에서도 전액을 소진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임채일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이 교육감은 "통합 시 교원의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다"며 광주 교육 일선에서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라앉혀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이 주도하는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현재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을 다듬고 있다.

법안 조안에는 교육자치 부문 20개 조항이 담겼으나 4차 회동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항과 문안 등이 바뀔 수도 있다.

/이승원 기자

특히 교육통합에 따른 현안을 해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이 특별법 부칙과 조례에 담길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이후 16일 법안을 곧바로 발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